

전북자치도, 저출생 대응 총력... 전담팀 가동

도·전북연구원·여성가족재단, 킥오프 회의 개최... 인구의 날 맞아 '저출생 대응 TF팀' 꾸려 저출생 대응 방안 모색

전북특별자치도는 저출생 대응 전담팀(TF) 가동을 위한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전북자치도는 제12회 '인구의 날'인 11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저출생 대응 전담팀 첫 회의를 열고 TF 운영계획과 정부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에 따른 대응계획, 각 실국별 사업 발굴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 저출생 대응 TF에서는, △일자리·주거 지원을 통한 결혼부담 완화, △건강한 출생부터 양육까지 촘촘한 돌봄,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문화·환경 조성을 목표로 각 분야별 정책을 점검하고 전북민의 도전적인 저출생 대응 방안 모색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저출생 대응 TF는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핵심과제별 직접 관련이 있는 기업유치지원실, 자치행정국, 복지여성보건국, 건설교통국,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방본부 등 7개 실국내 12개 부서와 정책발굴을 지원할 전북연구원과 전북여성가족재단(여성정책연구소), 민간전문단이 함께한다.

이울러, 인구대책에서 빠질 수 없는 외국인정책 등 정부 대책 관련 후속 대응을 위해 문화체육관광국, 환경산림국, 대외국제소통국 등 관련 실국도 함께 논의에 참여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제12회 '인구의 날'인 11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저출생 대응 전담팀 첫 회의를 열고 TF 운영계획과 정부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에 따른 대응계획, 각 실국별 사업 발굴방향 등을 논의했다.

먼저, 일자리 지원 과제에 전북특별법에 다자녀가구의 공무원 채용에 특단의 우대방안을 마련해 도에서 먼저 도입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까지 확산하는 등 혁신적인 다자녀가구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주거지원 과제로는 신혼부부·청년 임대보증금 확대지원과 전북형 반값 임대주택 건립추진 등이 논의됐다. 주거비 부담이 대폭 완화를 기대할 수 있도록 과감한 사업설계를 추진될 계획이다.

촘촘한 돌봄 지원을 위해서는 임신 준비·임신·출산·산후 단계별 지원을

확대하고 임신부·영유아에 대한 응급의료 안전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갑작스러운 돌봄수요와 초등 돌봄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통합돌봄 인프라와 서비스간 연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역량을 모은다.

일·가정양립 분과는 공직사회가 먼저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자유로운 육아시간 사용 등이 보장되는 일육아 동행근무제를 활성화하면서, 민간기업까지 확산하는 방안을 찾는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 분과별 정책발굴 방향에 맞춰 전북연구원, 전북여성가족재단 등과 함께 정책 연구, 분과

별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실제로 결혼을 준비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정책수요자의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월 1회 이상 TF회의와 분과별 수시 회의를 통해 저출생 대응을 위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발굴해 내년도 예산과 연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TF회의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이 참석해 저출생 대응 TF 발족을 응원하며, 도의회에서도 저출생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6월 24일 발족한 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경제·인문·교육·시민사회·의료계 등 18개 기관·단체가 함께하는 '전북 저출생 대응 지역연대'에서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인구와 저출생 문제는 도정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 관심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책이나 사업들로 마련될 수 있도록 주도적 시각에서 보다 과감한 정책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직사회가 앞장서서 가족친화적인 문화조성에 힘쓰고 '함께 양육'하고 함께 성공하는 '전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농어업 현장에서 생생한 정책 모색

전북자치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 농생명산업 혁신 방안 논의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위원장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11일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와 유기농업 인증 농장(농업회사법인 지열)을 찾아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과 친환경적 농업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에서 가공용 고구마 생산기술 개발, 바이오소재작물 연구 등 그동안의 성과들을 살펴보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전남 무안에 소재한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는 유채 자원 순환 체계 확산과 활용기술 개발, 고구마 등 신소득 식량작물의 기능성 탐색 및 가공 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소이다.

이어서 지열 농장(대표 송태운)을 방문하여 유기농 인증, 저탄소 인증을 획득한 농업회사법인 친환경농업 현장을 견학했다.

위원들은 현장에서 기계로 밭을 갈아 엮지 않는 무경운 농업의 장점에



전북자치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는 11일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와 농업회사법인 지열을 견학했다.

대한 설명을 듣고 토마토의 줄기·열매가 축산 사료와 퇴비로 활용되는 순환농업을 직접보며 친환경적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철규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장은 "농어업·농어촌위원회는 농업인,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농정거버넌스이다"라며 "앞으로 함께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발굴해 농생명산업의 혁신을 견인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참홍어 총허용어획량 2년 연속 전국 1위

전북자치도, 전국 3668톤의 37.2%인 1365톤 확보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7월에서 내년 6월까지 어기 참홍어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전국 배분에서 1,365톤(전국 3,668톤의 37.2%)을 배정받아 2년 연속 가장 많은 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북 다음으로는 전남 817톤, 충남 755톤, 인천 310톤, 경남 98톤, 제주 21톤 순이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어종별 로 연한 잡을 수 있는 양을 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대표

적인 수산자원관리 제도로, '09년부터 전남 신안과 인천 옹진 해역에서 시작하여 작년 7월부터는 서해 전역에 확대 실시한 바 있다.

서재희 전북자치도 수산정책과장은 "참홍어 총허용어획량(TAC) 추진으로 선진국처럼 엄격히 수산자원을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참홍어의 주산지가 군산으로 바뀌었음을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숲 이용한 에코 힐링 1번지 전북 만들기 '박차'

전북자치도,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정원문화 확대·산업 육성 추진... 2027년까지 4900억 투입

전북특별자치도가 숲을 이용해 사람의 생애주기에 맞는 새로운 관광휴양 패러다임을 선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에 나선다.

또한, 생활 속 꽃과 나무를 가르면서 체험과 교육, 치유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정원문화 확산에도 행정력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전북자치도는 11일 숲을 이용한 산림복지서비스의 수요에 발맞추고 새로운 관광휴양의 패러다임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을 비롯한 정원문화 활성화 계획 등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4,900억 원을 투자해 기존 산림복지 인프라 21종 269개소를 503개소로 확대하는 등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도의 이같은 계획은 산림 치유·휴

양 등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과 인구 구조변화, 산림레포츠 및 스키모임, 가족 단위 이용자의 증가, 휴양과 치유 등을 함께 복합적으로 이용하려는 수요변화에 맞춰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도는 관련 인프라와 이용 편의, 산림교육·체험의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산림의 효용 가치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2,140억 원을 투입해 226개소의 생애주기별 산림 복지서비스 기반을 보완·조성하기로 했다.

먼저, 출생기와 유아기에 맞춰서는 정서함양 및 건강증진을 위해 정원, 생활밀착형 숲, 유아숲체험원, 치유의 숲, 산림복지단지 등에 667억 원을 투자해 34개소를 조성한다.

청소년·청년기의 창의성과 인성발달을 위한 숲길, 산림레포츠, 수목원 등에 237억 원을 투자해 37개소를 보완·조성한다.

중·장년기 수요가 많은 산림휴양을 위해 자연휴양림과 산림욕장, 숲속 야영장에 310억 원을 투자해 24개소를 조성·보완하게 된다.

노년기·회년기는 생활 속 안전한 도시 숲, 도시바람 길 등 830억 원을 투자해 113개소를 조성계획이다.

또한, 취약계층과 소외계층, 보행약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해 누구나 쉽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 나눔 숲과 무장애나눔길, 복지시설 환경개선에 101억 원을 투자해 18개소를 확충하고 있다.

유아·청소년·성인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숲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숲해설

가,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복지 전문가를 80명 운영하고, 프로그램에 13만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자치도는 이와 함께 최근 생활환경의 변화로정원에서 체험과 교육, 치유 등을 경험하는 정원문화 확산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정원산업 확대를 위한 육성 계획도 마련했다.

정원문화·산업 확산의 거점인 지방정원과 민간정원, 도시 숲, 생활 밀착형 숲, 유아 숲 등 정원 인프라를 확충해 도민들이 어디서나 쉽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원 식물·소재 등 유통과 기술개발 등 정원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성장역량을 강화하며, 정원의 이용·체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가양성 및 운영 확대, 정원 치유 등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정원문화 확산과 산업을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강해원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와 정원문화 확대를 통해 도민들 삶의 질과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ail.com